▶ 제3차 민주당 제19대 대선후보자 방송사 합동토론회

날 세운 문재인, 安-李에 송곳 질문

李에 "기본소득 재원 감당 힘들다" vs 李 "가능"… 安에 "대연정은 당론 아냐" vs 安 "국민 70% 이상 동의"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제3차 민주당 제19대 대선후보자 방송사 합동토론회에서 정견 발표에 충실했던 앞선 토론회와 달리 경쟁 후보에게 날카로운 공격을 퍼부었다.

그는 기본소득을 공약한 이재명 성남시장을 향해서 "재원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날을 세웠고, 대연정을 주장한 안희정 충남지사를 향해서는 "대연정은 당론이 아니다. 그런데 정당정치를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자 독단적 주장이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표는 이 시장을 향해 "저도 이 후보처럼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전 국민에게 얼마씩 준다는 부분은 재원상 감당하기 어렵다. 그런 재원이 있다면 일자리를 만드는 데,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시장의 기본소득 공약을 빗대 "일정한 연령대에 속하는 2800만 국민에게 연간 100만원씩 주려면 28조원이 소요된다. 어린이를 포함해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토지배당을 주려면 15조원이 든다. 총 42조원이다. 지금 우리 국방비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이다"며 "지금 우리 조세 부담율이 19%가 안 되는데 이를 거의 22% 수준으로 3%를 한꺼번에 올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재원 대책으로 법인세 인상을 강조했다. 법인세 최저세율을 8% 올려 30%로 한다고 공약했다. 그렇게 한꺼번에 8% 인상하면 기업이 감당할 수 있냐"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올해 국가예산이 400조다. 대통령 재량 예산은 142조원이다. 이를 토목에 쓸 것인지, 자원비리외교에 쓸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7% 정도 부담이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맞섰다. 그는 "법인세 인상은 모든 기업이 대상이 아니라 영업이익 500억원 이상 기업만이다. 증세를 하는 것이 기업의 자금을 빼먹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다. 대기업과 재벌에 돈이 쌓이기 때문에 경제가 침체된다. 복지정책을 통해서 그걸 해결하겠다는 것"이라고 맞섰다.

문 전 대표는 안 지사를 향해서는 "(앞서) 대연정 질문을 했기 때문에 단답식으로 짚고 싶은 것이 안 후보는 정당정치를 강조한다. 그런데 대연정은 민주당 당론이 아니다.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이나 당원들, 지지자는 반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정당정치를 주장하는 것은 모순 아닌가. 독단적인 주장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또 "안 지사는 정책 공약도 후보 캠프가 아니라 정당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엊그제 나온 공약을 보면 국공립대학 등록금을 무상으로 한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 당 총선 공약은 국공립이나 사립 구분 없이 반값 등록금이다. 이런 부분은 정당정치 정책을 당에 맡겨야 한다는 (기존) 주장과 모순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안 지사는 "저는 그렇게 생각 하지 않는다"며 "내각 인사권을 의회와 논의하겠다는 것은 (내각 구성권을 가진) 당사자 입장에서 제안할 수 있다고 본다. 소연정이든 대연정이든 국민의 70% 이상이 연정에 동의하고 있다. 국민의 충분한 동의가 있고 정당정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최성 고양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왼쪽부터)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후보자 방송사 합동토론회에 앞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의당 민생투어, 고산 장터로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가 기득권 양당구도를 혁파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정치혁명을 추진하면서 첫 일정으로 전북을 방문했다.

국가대개혁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전주를 방문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재건을 위해 시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 민생을 청취했다.

이들은 14일 오전 완주군 고산면 장터에 방문해 시장 상인들과 민생 해결을 위한 국가 개혁의 고민을 함께 나눴다.

특히 재래시장육성지원법을 통과시켜 전통시장 활성화에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정동영 국가대개혁위원장의 고산 장터 방문은 전통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려는 취지에서 단순한 민심 청취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아울러 완주군 라 선거구 재보궐 선거에 국민의당 단수후보로 공천된 김희조 후보가 국가대개혁위원회에게 지역 현안을 짚어주며 민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대변했다. /안재용 기자

전북 2개 선거구에서 4.12 보궐선거

전북 2개 선거구에서 4.12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14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2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전북도의회 의원 보궐선거 1곳, 완주군의회 의원 보궐선거 1곳 등 2곳으로 최종 확정했다.

도의회의원 보궐선거는 전주시 제4선거구이며, 군의회의원 보궐선거는 완주군 라선거구(고산.비봉.운주.화산.동상.경천면)이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3월 15일부터 올해 3월 13일까지 당선무효, 피선거권상실, 사직 등으로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후보자등록 신청은 오는 23일과 2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해당 선거구선관위에서 접수하고 공식 선거운동은 30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4.12 재보궐선거의 선거사무일정, (예비)후보자 등 각종 선거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재용 기자

국민 통합 방안 충돌… '대연정' VS '청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4인은 14일 지상파방송 4사와 YTN이 공동 주최한 3차 합동토론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 통합 방안을 놓고 격돌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대연정'을 강조한 반면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은 각각 '정치인이 모이는 것이 통합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청산이 곧 통합이다'고 맞섰다.

안희정 지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말한다. 승복하라"며 "저는 국민 통합을 위해 대연정을 주장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 않으려면 적폐를 청산하고 국가개혁 완수해야 한다. 개혁하려면 강력한 수단 있어야 한다. 개혁입법을 처리할 때마다 촛불을 들어달라고 할 수는 없다. 대연정만이 국가개혁과 국민통합 유일한 수단이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저는 정치인이 모이는 게 통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문 전 대표는 "국민을 편 가르지 않는 나라, 어떤 국민은 배제되고 어떤 지역은 차별 받지 않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이 되면 그게 국민통합이다.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고 함께 할 때 국민통합이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시장도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며 "국가는 통합되는 것이 맞다. 그러나 그 통합은 공정한 경쟁 질서에서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함께 살 때다. 범죄자와 함께 살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시장은 "도둑을 이웃에 두고 어떻게 통합하나"라며 "암이 걸리면 수술해야 한다. 통합이란 이름으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범죄자를 용서했다. 청산이 곧 통합이다"고 맞섰다.

최성 시장은 "대통합 없이 국가발전은 없다. 야3당과 공동개혁정부를 구성해서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文-安 "이재명, 한쪽으로 치우친 후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14일 이재명 성남시장의 '사이다 발언'에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며 공세를 퍼부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제19대 대선후보자 방송사 합동토론회에서 이 시장에 "이 시장은 명쾌하고 속이 트이는 사이다 발언으로 유명한 반면, 안정감이 없고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는 (이 시장이) 한 쪽으로 기울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전 대표는 그러면서 "집권하면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사회적 대타협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쏘아붙였다.

이 시장은 이에 "통합이란 봉합이 아니다. 필요에 따라 가치를 바꾸는 것은 그 자체가 불안정하다는 것"이라며 "저는 제 입장이나 가치를 바꾼 적이 없다. 부패와 기득권을 청산해 모든 사람이 기회를 누리는 정상적이고 안정적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 지사 또한 "우리가 말한 많은 개혁입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이런 의회에서 개혁입법이 통과해야 적폐청산이 가능한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복안이 있느냐"고 '협치'에 대한 이 시장의 입장을 따져 물었다.

하지만 이 시장은 오히려 안 지사의 '대연정'을 겨냥해 "적폐세력과 손 잡고 그 적폐를 청산할 제도를 만드는 것 자체가 자가당착"이라며 "어떻게 부패 기득권 세력을 청산하겠다는 과제를 적폐세력과 손 잡고 청산할 수 있겠느냐"고 역공을 폈다.

그러면서 "적폐세력과 손을 잡는 게 아니라 국민과 손을 잡고 정면 돌파해야 한다"며 "그래서 야권연합정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이춘석, 익산 청년창업 특교세 6억 확보

더불어민주당 이춘석(익산갑) 의원은 행정자치부로부터 '구도심 청년창업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6억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특별교부세 6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전북 익산역 앞 구도심 문화예술의 거리 일대가 청년창업공간과 복고풍의 거리 경관 조성으로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행자부 장관에게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해 특교세를 확보하게 됐다.

'구도심 청년창업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34억원이 투입돼 지역 청년들의 창업 기반 마련과 문화예술 중심의 구도심 활성화에 나서게 된다.

이 사업은 아트몰과 창작스튜디오가 결합된 아트스페이스 건립(2017년 8월 예정), 구 삼산의원 이전 및 근대문화관 건립(2017년 10월 예정), 청년창업공간 건립이라는 세 가지 거점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아트 스페이스 건립과 구 삼산의원 이전을 위해 이미 20억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마지막 거점사업인 청년창업공간 건립 등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이 의원 측은 사업이 완료되면 역주변 구도심 지역이 젊은층을 위한 창업거점이자 문화적 소통의 공간 확보와 지역 상권 활성화, 도심 이미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의원은 "낙후된 구도심을 되살리고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은 지역민의 숙원이자 저의 핵심공약이기도 하다"며 "탄핵과 대선 같은 중앙정치는 물론, 시와의 협조를 통해 민생과 직결되는 지역현안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민주 대선 후보, 사드 해법 엇갈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제19대 대선후보자 방송사 합동토론회에서 중국의 사드(THAAD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대해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놨다.

문재인 전 대표는 "중국 관계에 관심많다. 사드 배치 문제는 정부가 잘못했다. 공론화 과정을 안 거치고 대외적 외교적 설득 노력없이 졸속으로 추진해 보복을 초래했다"며 "중국의 보복이 있는 이상 정부는 팔을 걷고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 중국도 중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하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피해 받는 자영업자, 중소기업, 중국 현지 교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뛰겠다"며 "어떤 경우에도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는 메시지를 중국에 전하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사드가 안보에 도움이 되면 제가 왜 반대하겠느냐. 사드는 중국으로부터 경제보복을, 미국, 일본과 관계를 비정상적으로 만드는 정책"이라며 "사드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졌다. 잘못 되면 정상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뉴시스

민주당-국민의당, 친박 사저정치 '맹폭'

우상호, 비박 탈당 촉구

박완주 "김진태, 법사위 간사 내려놔야"

주승용 "사저정치 시작"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자유한국당 소속 일부 핵심 친박 의원들이 '탄핵 불복' 의사를 밝히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엄호하고 나선 것과 관련, 박 전 대통령과 친박계를 싸잡아 비판했다. 자유한국당내 비박계에게는 사실상 탈당을 촉구하기도 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친박계가) 반성과 성찰을 하고 있으면 되지만, 극단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비박계가) 같은 당에 있는 것은 동조하는 것"이라며 "자유한국당 내의 이런 친박 세력과 동거하는 어정쩡한 정치인들은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비박계의 탈당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 원내대표는 "이들과 함께할 것이냐, 결별할 것이냐 정해야 한다"며 "용기가 없어 못 나오는 것도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친박 의원들은 극우, 수구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 헌재 결정을 불복하고 거짓을 유포해 수구보수 세력을 재결집하겠다고 방향을 잡은 것"이라며 "이것은 역사의 퇴행"이라고 친박 의원들을 비난했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일부 친박계 의원들이 박 전 대통령 보좌를 자청한 것에 빗대 "삼성동계라는 새로운 계파 등장이 당황스럽다. 결국 대통령 탄핵에도 반성은 커녕 새로운 계파를 창조하는 자유한국당의 민낯을 국민은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을 향해서는 "헌재 결정에 승복하지 않는 박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 노릇을 하려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부터 내려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에는 "3월 국회에서 김 의원이 또 법안 발목잡기에 나선다면 책임지고 즉각 사보임 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친박이 실패한 대통령을 임금님 모시듯 싸고도는 건 국민을 위하는 길이 아니다"며 "박 전 대통령은 이제 자숙하셔야 한다.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해 정치적 사망선고를 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친박계 의원들이 박 전 대통령 보좌 역할을 자청하고 나선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 친박 핵심 의원들이 박 전 대통령 보좌팀을 구성했다고 한다. 헌재 불복 논란에 이어 사저정치를 시작한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 재판과정에 대비해서, 친박 의원들은 향후 대선 정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사저정치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해 누구든 붙잡고 싶을 것"이라며 "사기를 보면 지위가 높을수록 들고 나갈 때를 알아야 한다고 했다"고 일갈했다. 친박계를 향해서도 "자신들이 만든 대통령다운 모습을 역사에 남게 보좌하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뉴시스

'대선일' 금주 임시국무회의에서 지정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대통령 선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대신 정부는 이번 주 내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선거일을 지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160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 · 의결했다.

그러나 대선일의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은 상정하지 않았다. 선거일 지정 자체는 국무회의 결정 사안이 아니지만 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이번 국무회의에서 선거일이 상정돼 의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가 아직까지 선거일을 최종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 선거일 지정은 법정 기한인 3월 20일까지 이뤄질 것이며 아직 구체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대선일의 임시공휴일 지정도 관련 부처의 건의를 받아서 법에 따라 처리될 예정으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행자부가 선관위와 협의를 거쳐 대선 일자를 보고하면 황 대행이 이를 확정 · 공고하는 절차를 거친다.

대선일 공고시한이 오는 20일까지인 가운데 황 대행은 17일까지는 대선일을 지정해 공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